

주제회의

노인

“국가폭력의 고통과 집단기억 :  
부마항쟁 피해자를 중심으로”

김종세

[한국,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국가폭력의 고통과 집단기억 : 부마항쟁 피해자를 중심으로

### 1. 항쟁 속 '고통의 경험'

1979년 부마항쟁이 발발한 지도 40년을 넘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마항쟁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1명이고 연행된 인원이 최소 1,563명을 넘는다. 이 중 부산의 경우 현재 대략 70%가 60대이고, 10%가 70대 이상이다. 그 때의 주역이었던 청년들이 어느덧 대부분 예순 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계엄군의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경찰이 체포할 때 구둑발로 고환을 가격하여 경찰서 보호실 수감 당시 사타구니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흥건히 적셨는데도 경찰이 방치하였고, 이후 고환 절제수술을 받고 생식기능이 감소되었다. (시민 안○○)

경찰이 던진 사과탄이 얼굴에서 폭발하여, 코, 눈, 귀, 이마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파편이 박힌 채 기절했다. (고교생 서○○)

계엄군에 해산된 뒤,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두피 파열되었고, 두개골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피 흘리며 집으로 도망쳤다. 경찰 추적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못하고, 머리에 된장을 발라 응급 처치 후 자가 치료하였다. (시민 곽○○)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갖가지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항쟁을 여론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작공작도 실행되었다. 남민전사건 관련 조작, 간첩단 사건 조작, 종교계 배후 조작과 양서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총기 사건 조작, 파출소 방화범 조작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과 각종 고문이 자행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자해, 자살 미수 등이 일어나고, 신체 손상이나 성고문에 의한 정신 충격 및 '넋이 나간'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아마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전국적 규모의 좌익사건이 조작되어 국가폭력의 피해가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무차별 폭행, 조사가 시작되자 '투석을 시인하라'는 강요와 함께 폭행을 당하였다. 얼굴이 퉁퉁 부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 지하실로 끌고 가서 얼굴에 봉지를 씌우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고문을 당하였다. (시민 한○○)

사망한 부친이 친북인사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존재도 모르는 백부와 숙부를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관계자라고 우겼다. 그 결과 나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최성목 목사를 수괴로 하고 김광일 변호사를 자금책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에 속하여, 학원에 침투하는 임무를 맡아 부산대 학생들을 포섭했다는 조작극이 만들어졌다. 수사는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극단적인 폭력 고문을 동원하며 진행되었다. 나로 인해 합수단에 연행되어 취조를 당한 지인들과 친인척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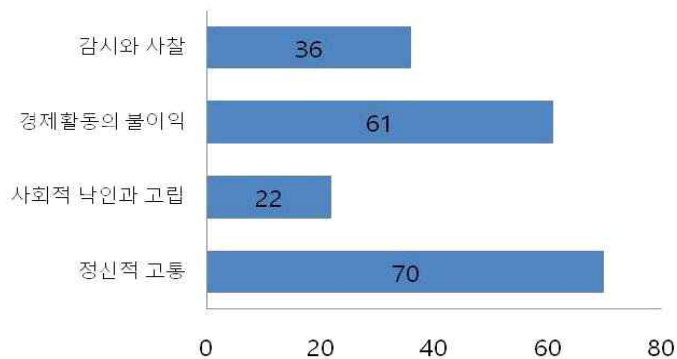
미안함은 물론, 고문에 굴복하여 조작에 협조했다는 자괴감, 나의 허위자백이 녹음되어 다른 관련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데 악용된 사실 등으로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 한 차례 허를 깨물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결국 동래경찰서 2층에서 몸을 던졌다. 하지만 전신줄에 걸려 몸이 한 차례 굴절되면서 떨어진 탓에, 머리가 아닌 어깨가 먼저 바닥에 닿아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시민 황○○)

경찰서 유치장에서 ... 밤중에 경찰들이 와서 어딘가 지하실로 끌고 가서 팬티만 입혀놓고 막 주무르면서, “몸매 끝내준다.”, 또 온갖 욕설을, “처년지 아닌지 검사해봐야 된다.”, 그리고는 “이 녀은 애를 못 낳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꼬챙이를 가지고 마구 찔러 댔습니다. 군홧발로 하복부를 막 짓이기듯이 밟았고, 저는 하혈을 하고 그랬어요. (대학생 최○○)

## 2. 항쟁 이후 ‘고통의 기억’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상당수는 석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감시와 사찰, 강제 해직이나 구직활동 방해 등 경제활동의 불이익, 사회적 낙인과 고립,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관련자 247명을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sup>1)</sup>

<그림> 부마민주항쟁 이후 관련자의 피해유형 (단위 : 명)



또한 항쟁 당시 조사 과정에서 당한 고문, 구타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가 더해져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여럿 있다.

석방 당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었고, ... 그 후부터는 소규모 가내공업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 찾아오고 회사 와서 내 월급대장 뒤져보고 이 사람 일 열심히 하나? 그러니 회사에서도 나를 좋게 안 보는 거지. 결국 전과자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1) 이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47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면담조사서와 각종 증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분류한 것이다. 관련자의 피해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2개 이상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중복 반영하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숨기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람 미치겠더라고, 완전히. 그래도 원체 내 기술이 좋으니까 사장이 내보내지는 못하고, ... 그래야 이래 안 되겠다 싶어 84년도부터 내 사업하게 됐지. 하다가 부도도 맞고, 맨날 돈에 허덕이는 거지. (시민 황○○)

84년 명화여상에 수학교사로 취업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와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직토록하였고, 85년 후세기계에 취업하여 현장 일을 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와 “과거 시위 전력이 있는 자를 해직토록 하라”는 강요와 압력으로 86년 공장장으로부터 퇴사 요구 받고 퇴직하게 되었다. (대학생 이○○)

경찰서에서 3일간 매일 밤 불려나가 조사를 받다가 환청과 환각을 경험하였다. 환각 속 경찰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찡는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고, 징집면제를 받았다. 이후 2년여 정도 약을 먹는 등 치료했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직장을 여기저기 여러 곳 전전하였다. 지금은 심리적 안정 되찾았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정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대학생 권○○)

석방 이후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성고문에 대한 소문이 만연하여 그 뒷담화를 이기지 못해 정서불안 및 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지금도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다. (대학생 최○○)

부마항쟁 이후, 부마항쟁은 소속감을 공유한 대학생층 등에게는 ‘자부심의 기억’으로 남았으나, 사회적 관계망을 갖지 못한 노동자와 무직자 계층 일부에서는 ‘고통의 기억’이었고, 이것은 오래 지속되었으며 심한 고립감을 겪게 했다. 물론 폭행과 고문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기억’ 자체가 또한 공포요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개인의 고통으로 오랫동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 3.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승화

부마항쟁 국가폭력의 피해자 고통이 개인 차원으로 감내하는 것에 그친다면 부마항쟁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잊혀진 사건’, ‘잊고 싶은 사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집단기억으로 사회화 하고, 나아가 항쟁사의 지평을 넓혀 유신 선포 이후부터 유신 체제 철폐 때까지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동시에 소환한다면, 고통의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사회 속에서 해원(解冤)하고 상생할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 1) 집단기억으로 사회화

오랫동안 이들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개인 차원에서 국가폭력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기억으로 사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부마진상규명위가 발족되었으며 2018년 부마항쟁기념재단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러한 법적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고통의 기억이 쉽게 사회화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회화 과정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유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폭력 진술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피해자와 관계맺기를 통해 피해자가 고통의 기억 속에 꼭꼭 숨기고 있던 사실과 자기 감정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털어놓고 이야기 하는 게 치유에 이르는 길”이다. 이러한 진술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야 집단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부마항쟁기념재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마항쟁진상규명위는 관련자 여부와 피해보상에 목표를 두고 제대로 훈련 받지 않은 조사관이 한두 차례 무미건조한 인터뷰를 하고는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폭력의 양태를 나름의 상상으로 판단하고 회의라는 건조한 형식 속에서 보상 여부만을 심사결정 하는 것으로 일을 끝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고,<sup>2)</sup> 진실된 고통의 기억을 캐낼 수 없다.

그리고 관련자를 위한 예우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이 민주유공자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이 법을 통해 전문기관이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치유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 한편 공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비극적 국가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민주와 인권을 중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에 부마항쟁이 어떠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부마항쟁과 관련한 국가폭력의 고통과 집단기억을 논의할 때에는 박정희와 그에 부역한 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여태까지 박정희 정권에 부역한 자, 그 대가로 챙긴 이익에 대해서는 처벌도 없고 성찰도 없다. 그 대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기념의식, 연설, 퍼레이드, 진부한 이야기 그리고 ‘항쟁 실화’를 통해, 항쟁의 영웅과 피해자만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윤리로 기억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2) 항쟁사 지평의 확대

현행법상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과 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

2)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기준씨 사망 사건을 밝혀내고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을 한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은 돋보인다.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정치적 역사적으로 본다면 진상규명의 시간과 공간은 다르다. 시간적으로는 부마항쟁의 배경인 박정희 통치기, 그리고 부마항쟁에서 구호로 제기된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가 달성되는 87년 6항쟁까지를 하나의 역사적 국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간 대상은 국내외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단지 1979년 10월의 피해자뿐 아니라 최소한 부마항쟁에서 철폐를 외쳤던 유신 선포 이후의 피해자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 조작사건으로 형장의 이슬이 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들과 위헌적 유신헌법으로 감시, 연행, 고문, 구속, 해직되었던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소환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노조활동으로 인해 반공법과 간첩조작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을 소환해야 한다. 특히 성장·개발지상주의에 내몰려 피땀으로 생존전쟁을 치른 ‘영자’들과 ‘공돌이’ ‘공순이’들, 돈에 눈먼 부동산 투기와 재개발로 삶의 터전에서 버려진 ‘난장이’들, ... 이들의 피해와 고통을 기억하고 소환해야 한다. 또한 ‘유신 잔당’에 의해 자행된 5.18학살의 피해자와, 87년항쟁으로 민주헌법을 쟁취함으로써 비로소 유신헌법의 적폐를 걷어낼 때까지 국가폭력에 희생된 그 많은 피해자들을 소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부마항쟁의 유산을 전승하는 일은 ‘인권공동체’의 논의를 온전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